첫 시행 대학 입학사정관제 깐깐했다

아는체 했다 심층질문에 곤혹

■ 조선대 참관 해보니

서편제 읽었다는 학생에

"딸 눈 멀게한 이유 뭔가"

26일 조선대학교에서 치러진 특별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한 수험생에게 해외 어학 연수를 비롯한 각종 사회 활동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호스피스 활동을 한 사람이 안락사를 찬성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닌가"(간호학과) "생명과학은 가톨릭의 창조질서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기초의학부)

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이 아닌 잠재력·창의력을 보고 신입생을 뽑는 입학사정관 특별전형 면접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입학사정관제도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전국 각 대학이 매년 대상 인원을 크게 늘려가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말쯤엔 대학 입시제도가 거의 100% 입학사정관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언급, '대입 전형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새 전형의 선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광주일보는 26일 조선대학교에서 실시된 입학사정관 면접을 들여다봤다. 조선대는 이날 의과대학 3호관에서 입학사정관 특별전형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26개 학과(부) 154명을 대상으로 70명을 선발하는 면접을 치렀다. 입학사정관 2명이 한 조가 돼 수험생 1명에게 7분간 질의·응답하는 형식이다.

질의는 지원자의 인성과 전공 적합성, 성장 가능성, 창의성 등을 염두에 두고 '1인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39명의 입학사정관들은 1박2일 합숙하며 지원자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성적부 등을 참고로 개별 질문지를 작성했다. 입학사정관들이 선발의 기준으로 삼은 평가 척도와 질문 유형 등을 소개한다.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경험이 우선=지원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을 묻는 것은 기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지원 분야에 대한 구체적 경험이나 관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지 여부이다.

"요리 경연대회 수상 경력이 있던데 4년 동안 목표로 둔 요리나 연구 분야는 무엇인가"(식품영양학과 수험생 대상) "밥을 맛있게 빨리 짓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가"(식품영양학과) 등처럼 전공에 맞는 구체적인 경험과 사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배점이 높다.

◇사회에 대한 관심과 폭넓은 사고=사회의 흐름과 다양한 현상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기초의학부를 지원한 한 수험생에게 '전통적인 덕목 중 하나인 효(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또 다른 학생에게는 '생명과학은 가톨릭의 창조질서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가 주어졌다.

◇지원학과 관련 고교 과목 성적, 체험 활동은 필수=수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화학이나 생물 등 관련 과목의 성적(학생부)이 좋지 않으면 불리하다. 기초의학부나 간호학과 지망생들은 의료 관련 봉사활동 경력이 있으면 플러스가 된다. 어학 계열의 해외 연수와 같이 전공과 관련한 사회 활동이면 좋고,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회 활동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과대포장은 탈락의 지름길=자기소개서에 능력을 과대포장하거나 진실성이 낮아보이는 답변은 금물이다. 모르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낫고, 학원식의 매끄러운 답변보다는 어설프더라도 나름의 소신있는 생각을 피력해야 유리하다. 대충 아는 체 할 경우 서너 차례 관련 질문이 추가돼 결국에는 바닥이 드러난다.

고교시절 '서편제'를 읽었다는 수험생에게 "'유봉'이 딸인 '송화'의 눈을 멀게 한 이유는 뭡니까"라는 질문이 던져졌다. 인상깊게 읽은 책 10여권을 적어 낸 한 학생에겐 그 중 '오만과 편견'의 주제와 내용을 설명하라는 주문이 주어졌다.

김수남 입학사정관(문예창작과 교수)은 "답변은 학원 등에서 주입된 모범답안(?)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피력하는 지 여부를 따졌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순위 뒤바뀐 '건강개선사업'

평가위 '서구 1위'…광주시 '남구 1위'로 수정

평가위원·자치구 반발

광주시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각 자치구의 지역사회건강행태 개선사업을 평가하면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임의로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이 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차등 지원받는 각 자치구 보건소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일부 평가위원과 자치구가 반발하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5일간 조선대 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타 시도 전문가까지 포함된 8명의 평가위원이 '건강행태위험인구 수 대비 프로그램 참여자 수', '시도자율평가' 등 모두 17개의 항목에 대해 5개 자치구의 실적 평가를 실시했다.

이 평가에서 서구가 1등급(95.3점), 남구(94.3점)와 광산구(94.3점)가 2등급, 동구(89.3점)와 북구(85.8점)가 3등급을 받아, 내년 초 각각 1억원, 6천800만원, 5천400만원의 사업비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는 평가가 끝난 뒤 '시도자율평가' 항목의 점수를 수정했으며, 이에 따라 남구(95.625점) 1등급, 서구(95.250점) 2등급으로 갑자기 순위가 바뀌었다. 시도자율평가 항목에서 각각 14점을 받은 남구와 광산구를 서구와 같이 15점으로 1점씩 상향 조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평가위원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시도자율평가에 대해서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일률적으로 15점을 부여해 수정했다"며 "모든 자치구 보건소가 신종플루로 인해 고생했는데, 이 항목점수로 순위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헬기 인양…블랙박스 회수 원인 조사

지난 23일 영암호에 추락한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용 '까모프'(KA-32T) 헬기 인양작업이 착수 3일 만에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7일 영암군 삼호면 망산리 영암호 개펄에 추락한 사고 헬기를 인양하는 데 성공, 사고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현대 삼호중공업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본격적인 '까모프' 헬기 인양작업에 나섰다. 조사위와 함께 인양작업에 나선 크레인업체는 길이 30여m, 폭 17m의 크기로 연결된 바지선 2척에서 내려진 케이블을 수심 3m 바닥에 가라앉은 사고 헬기 곳곳에 걸어 기체(機體)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다음달 4일까지 현대 삼호중공업에서 1차 조사를 마칠 예정이며, 블랙박스도 회수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기체를 서울 항공조사위원회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영암=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지난 23일 영암호에 추락한 산림청 산불진화용 '까모프'(KA-32T) 헬기의 동체가 인양 작업 나흘째인 26일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영암소방서 제공〉

나원참 〈7964〉 김종두

'공갈' 순천 주재기자 벌금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장수영 판사는 2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일간지 기자 A(60)씨와 A씨의 처인 B(58)씨에 대해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순천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과 여교사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아들의 결혼이 무산된 점 등을 이유로 교장으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수배자 조회도 않고 석방 '눈총'

쌍나팔

○…경찰이 수배 조회도 없이 수배중인 불법 사행성 오락실 업주를 풀어준 것으로 드러나 빈축.

○…26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하당 지구대는 지난 6일 밤 10시께 목포시 상동 한 건물에서 사행성 오락실 업주 진모(4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검거 당시 입은 상처를 치료한 뒤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석방.

○…경찰은 진씨를 석방하는 과정에서 수배 조회도 않고 풀어줬으며, A씨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직후 도주해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제기.

○…경찰 관계자는 "도주 후 확인 결과 진씨는 불법 오락실 운영으로 기소중지된 상황이었다"며 "반드시 검거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1년 전 수술 환자 몸에 수술용 바늘이…

영암 50대女 가족, "의료사고" 병원 고소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의 몸 안에 수술용 바늘이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하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도 보상은 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영암에 사는 P(여·50)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과 함께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부터 심한 복통에 시달려야 했다. 6개월 뒤에도 복통이 사라지지 않자 해당 병원을 다시 찾은 P씨는 초음파검사 결과 방광과 신장이 부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처방전대로 약을 복용했으나 증세는 더욱 악화됐다. 결국 지난 16일 광주 모 한방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P씨의 몸 안에 4㎝ 가량의 수술용 바늘이 들어 있었다. P씨는 며칠 전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용 바늘을 꺼내기 위해 다시 절개(切開) 수술을 받았다.

P씨의 아들 Y(28)씨는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던 병원을 찾아갔다. 그러나 "환자와 함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의사로부터 면담을 거부당했다.

이에 Y씨는 지난 23일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해당 병원을 광주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Y씨는 고소장에서 "해당 병원에서 자궁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절개 수술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머니의 병원 치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병원 측의 과실이 명백한 '의료사고'인만큼 공식 사과하고 진료비 등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P씨의 상태를 직접 살펴봐야 하는데, 이미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해버렸다. 환자 상태를 보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